등을 통해 역내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신뢰구축조치, 재난구호, 초국가적 범죄(해적, 불법이민, 소형무기 불법거래 등) 전문가 회의, 예방외교 발전 등 각종 논의를 통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ARF는 신뢰구축 차원에서 국방정책서 발간, 국방정책 발표, 국방백서 발간/배포, UN 재래식무기 등록제도(UNCAR) 참여 및 연례 제출사항 회람, 지역국가간 쌍무 안보/군사 대화, 고위 국방인사 및 군사훈련 교류, 군축/비확산체제(NPT, CTBT, CWC, BWC, CCW 등)를 합의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신뢰구축조치는 1~2년 내 추진할 단기과제인 바스켓Ⅰ과 중·장기과제인 바스켓Ⅱ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다. 현재 바스켓Ⅰ에는 군수 및 군법분야 교류협력,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협력, ARF 활동 홍보, 해적 퇴치에 관한 워크숍, 신뢰구축 세미나, 인도적 지원에 관한 세미나 등이 추진되고 있다. 바스켓Ⅱ에는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 마약퇴치 및 차단 세미나 개최, 군사분야 환경보호, 국가간 범죄인 단속 등을 포함한 법적 지원방안 모색, 국제 테러리즘과 범죄 관련 협력, PKO 세미나, 아·태 안보에 관한 합동 워크숍, 예방외교에 관한 외무 및 국방관리 워크숍, 전쟁법 세미나, 재래식 무기에 관한 세미나 등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2000년 10월 30~31일에는 초국가 범죄 전문가회의가, 11월 1일~3일에는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ISG-CBMs)가 한국과 말레이시아 공동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그 외에도 ARF는 해양안전, 해양 법·질서, 해양환경 보호·보존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아울러 예방외교활동의 지속적 발전을 촉구하면서 회기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993년 6월 발족한 CSCAP은 역내 다자안보대화를 통해 국가간 신뢰를 증진하고 정부차원의 안보협력을 지원·강화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안보대화체로서 현재 남북한을 포함하여 20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이 대화체는 지역안보문제에 대한 정책 건의 형식으로 ARF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예방외교 분야의 개념과 원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나.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대화

1990년부터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차원의 다양한 안보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 정부는 1994년 5월 ARF 고위관리회의(ARF-SOM)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참가하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를 공식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 제의는 일부 국가들의 소극적 입장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역내 국가들과 다자안보협력대화체 설립에 관하여 협의

내용누락

우리 정부는 2000년 NPT 평가회의 참석을 통해 핵무기 확산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CTBT가 발효될 수 있도록 비준 요건국(5대 핵 보유국을 포함하여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44개국)의 조기 서명·비준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IAEA의 핵사찰 활동 및 '전면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내 여러 분야에 전문가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나. 화학무기 통제

1997년 4월 29일 발효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이전, 비축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30일 이내에 협약에 규정된 내용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신고한 후 현장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 동 협약에는 2000년 9월 현재까지 171개국이 서명하였으며, 139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고, 국내 화학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28일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하였다. 동년 5월의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OPCW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1998년 11월 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의장직을 맡아 1999년 4차 당사국 총회까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차, 3차 및 4차 당사국 총회에 이어 2000년 5월 개최된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우리는 북한의 CWC 협약가입을 통한 화학무기위협 해소를 위해 전세계의 모든 화학무기 보유 추정국이 협약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OPCW가 노력해야 한다는 '보편성 결의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OPCW 본부에 우리나라의 영관 장교 4명이 고위직 간부 및 국제 사찰관 요원으로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화학분석실은 1998년 11월 OPCW의 '공인 화학분석실험실'로 지정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ADD 화학분석실

다. 생물무기 통제

1975년 3월 26일에 발효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는 2000년 9월 현재 145개국(한국 : 1987년 6월, 북한 : 1987년 3월)이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BWC의 이행여부를 감시할 검증체제가 결여되어 있어

회원국들은 정부전문가회의(VEREX), 특별그룹(Ad hoc group)회의 등을 개최하여 검증체체 구축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1996년 12월 BWC 제4차 평가회의 최종 선언문에서 제5차 평가회의(2001년) 시점에서 검증의정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서방그룹들은 2000년 말 또는 늦어도 2001년 초까지 검증의정서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 및 작용제 선정, 방문 및 사찰제도, 그리고 기술협력 등 일부 사안에 있어 서방 그룹과 비동맹국가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나라는 제네바 대표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산하연구소 요원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특별그룹회의 및 평가회의에 파견하는 등 생물무기의 확산을 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라. 미사일 통제

오늘날 대량살상무기의 개념은 핵 및 화생무기뿐만 아니라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사일 통제는 대량살상무기 통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 차원의 미사일 통제체제로는 회원국들의 자발적 수출통제를 전제로 한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MTCR)가 유일하다.

MTCR은 1987년 미국 · 프랑스 등 선진 7개국이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및 관련 부품 · 기술의 국가간 이전과 최종 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출범하였으며 현재 3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MTCR은 민간 항공우주산업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공격용 미사일의 확산을 저지하고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MTCR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아직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미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제반 조약과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1993년부터 MTCR 지침을 '전략물자 수출 · 입공고' 에 반영하여 준수하고 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한국이 MTCR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마. 재래식무기 통제

최근 국제분쟁지역에서 재래식 무기에 의한 무고한 민간인 살상에 따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재래식무기 통제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소형무기 및 지뢰에 대한 국제적 규제 논의가 유엔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을 중

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3년부터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UN의 '재래식 무기 등록제도' (UN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에 참여하고 있으며, 등록대상 7개 무기체계의 수출 · 입 현황을 매년 UN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의 무분별한 이전 방지를 목적으로 1997년에 출범한 바세나르체제에 참여하여 해당 통제 품목을 '전략물자 수출 · 입 공고' 에 반영하여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대인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뢰를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형성되면서 1980년에 체결되었던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의 제2부속의정서(일명, 지뢰사용 금지 의정서)가 1996년 5월에 개정되었다. 개정안은 탐지가 불가능한 대인지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동 폭발 및 자동 무능화 기능의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 지뢰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CCW 제2부속의정서 개정만으로는 지뢰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대인지뢰 전면금지를 위한 오타와 협약을 채택하였다. 오타와 협약은 1999년 3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2000년 9월 현재 전세계 139개국이 서명하고 107개국이 비준하였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인지뢰 전면금지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특수한 안보 상황하에서 군사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방어수단인 지뢰의 사용을 당장에 전면 중지하고 단시간에 보유지뢰를 폐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타와협약' 에는 바로 참여할 수 없고, 대인지뢰 대체수단이 개발된 이후에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통일 후 지뢰 제거를 위한 국제협력과 기술지원의 획득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UN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다 융통성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 (CCW)에는 2000년도 내 가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 때문에 예외적인 대인지뢰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넓혀 나가는 동시에 대인지뢰의 대체수단 획득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여 백

제3부 우리 국방의 현황과 과제

제1장 국방중기계획과 국방예산
제2장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위한 국방 투자사업
제3장 21세기를 대비한 국방정보화
제4장 선진 정예군 운용을 위한 국방인력 육성
제5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제6장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한 동원태세 확립

여 백

제1장 국방중기계획과 국방예산

제1절 국방중기계획

1. 국방중기계획의 성격

국방부는 미래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 건설방향을 모색하며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방기획관리제도에 따라 업무를 기획-계획-예산-집행-평가 단계로 나누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

국방중기계획은 기획관리제도상 계획단계의 핵심문서로서, 향후 5개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실천 가능한 다년도 사업계획으로 구체화시킨 국방운영의 청사진이다. 이것은 기획단계에서 제시된 중·장기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목표, 군사력 건설 소요 및 국방가용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작성된다.

이렇게 수립된 중기계획은 기획과 예산을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국방개혁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구현하는 출발점이며, 당해년도 예산편성과 부대의 증·창설, 개편·해체계획과 인력운영 및 정원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다.

2. 2001~2005 국방중기계획

2001~2005 국방중기계획은 제한된 국방재원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전력투자 및 경상운영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제로베이스(Zero-Base)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방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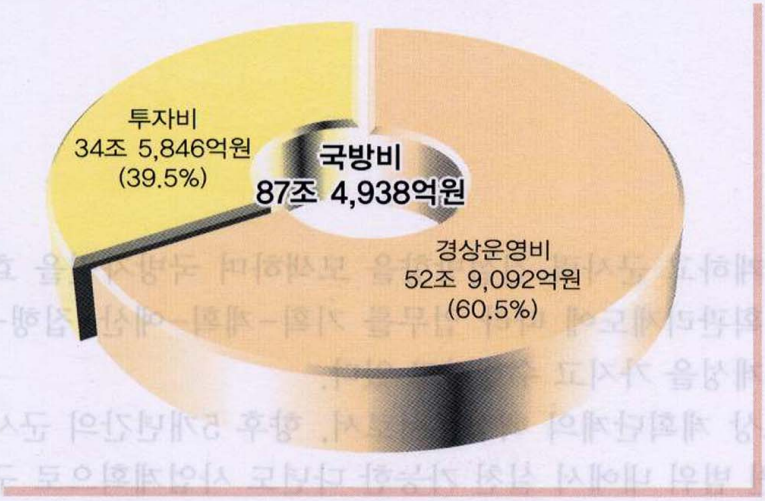
2001~2005 기간 중 국방 가용재원의 규모는 정부의 '2000~2004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연평균 정부재정 증가율 수준인 6%를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그 결과 향후 5년간 총 가용재원은 87조 4,938억원으로서 GDP의 2.6%, 정부재정의 16.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재원의 분야별 배분은 실질적 전력증강 소요를 우선 반영하여 투자비 비중이 2000년도 37.0%에서 2004년에는 39.5%가 되도록 계획하였다(도표 3-1 참조).[1]

1) 2000년부터 기존 운영유지비에 반영되던 수리·부속 등 장비유지비 및 획득비를 '투자비'로 전환하고 장비획득에 수명유지 관리개념을 적용하여 장비의 경제적 유지관리 및 가동률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투자비의 연차적 증가는 현대 및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전력의 조기확보와 첨단장비 도입에 따른 장비유지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도표 3-1] 2001~2005 국방재원 배분



분야별 주요 반영사업 중 먼저 투자비 분야는 C4I체계의 핵심 기반체계 구축, 감시 및 전자전 대응능력 향상, 전차성능 개량, 공격헬기 도입, 한국형 구축함 및 이지스급 구축함(KDX-II/III), 차기전투기, 차기유도무기(SAM-X) 양산, 선진국 수준의 군사기술 축적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KF-16 추가생산 등이 반영되었다.

경상운영비 분야는 국방정보화, 과학화 훈련장 설치, 환경보전시설, 병영기본시설 및 간부 주거시설 개선, 교육기관 시설개선, 국방전문요원양성,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등이 반영되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장차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대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조립식 건물 및 컨테이너 활용을 확대하고 고정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여 국방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제2절 2000년도 국방예산

2000년도 국방예산은 첨단 정보·과학전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전력의 구축, 장병 사기복지 증진을 위한 군 숙소 확보 및 급식비 인상, 그리고 국방정보화 및 과학화훈련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기타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1. 일반회계예산

2000년도 일반회계 국방예산은 총 14조 4,390억원으로 1999년도보다 5.0% 증액되었으며, 분야별 편성예산은 도표 3-2와 같다.

투자비는 1999년보다 2.2% 증액되었으나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도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었다.[2] 이는 정부의 공무원 처우개선 방침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투자비의 가용재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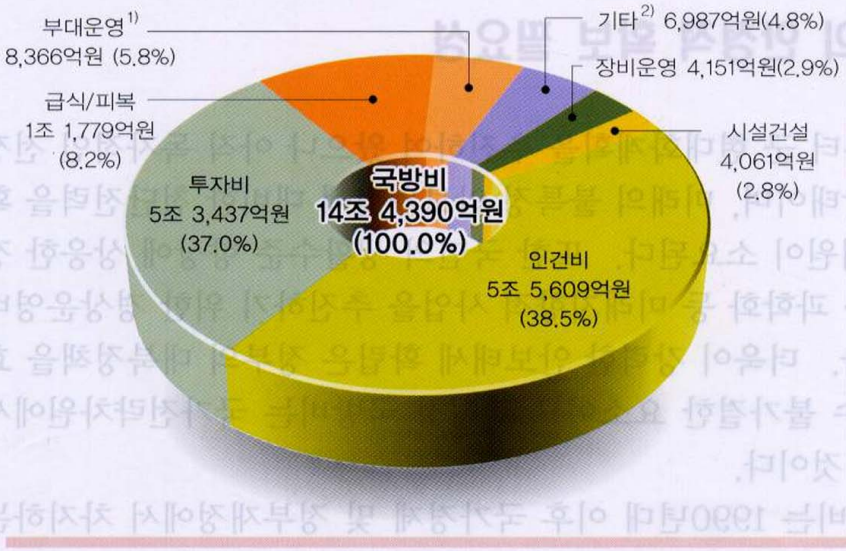
[도표 3-2] 2000년도 국방예산 규모

(단위:억원)

구 분	1999 예산	구성비	2000 예산	구성비	증 감	%
국방비	13조 7,490	100.0	14조 4,390	100.0	6,900	5.0
투자비	5조 2,304	38.0	5조 3,437	37.0	1,133	2.2
경상운영비	8조 5,186	62.0	9조 953	63.0	5,767	6.8
· 인건비	5조 298	36.6	5조 5,609	38.5	5,311	10.6
· 사업비	3조 4,888	25.4	3조 5,344	24.5	456	1.3

투자비 배분은 한반도 안보전략 환경에 부합되는 고도 정밀무기체계 및 첨단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한 정보화 · 과학화의 핵심전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 · 공군의 투자비 증가율을 육군보다 높게 하였다.

[도표 3-3] 2000년도 국방예산의 기능별 배분 현황



※ 1) 부대 운영 : 시설유지, 물자획득, 전산/정보, 주둔군 지원 등
2) 기타 : 교육훈련, 예비전력관리, 연구기관운영, 기본사업비 등

경상운영비는 전년도보다 6.8% 증액되었으나,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는 1.3%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전문인력 양성과 국방정보화 및 과학화 훈련 등은 미래지향적 분야에 가용재원을 중점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여,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편성하였다.

2) 1999년의 '투자비'는 2000년부터 변경된 '투자비' 개념을 적용하여 종전의 '방위력개선비'를 전환, 계상한 것임.

2. 특별회계예산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는 군인연금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있다.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현역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부담금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퇴역군인에 대한 연금지급 소요를 충당하는 데 쓰이고 있다. 2000년도 군인연금특별회계는 처우개선과 연금지급 인원 및 퇴직일시금 지급 소요 증가 등으로 1999년도보다 463억원이 증액된 1조 593억원이 편성되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도심지에 있는 군용시설을 매각한 재원으로 부대를 교외로 이전하는 사업과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다. 2000년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34개의 군용시설이전사업과 민원해소를 위한 군 사용 사유지 매입비로 2,414억원을 책정하였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국방홍보원(舊. 국군홍보관리소)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0년도에 처음 신설된 것으로써 185억원이 편성되었다.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행정기관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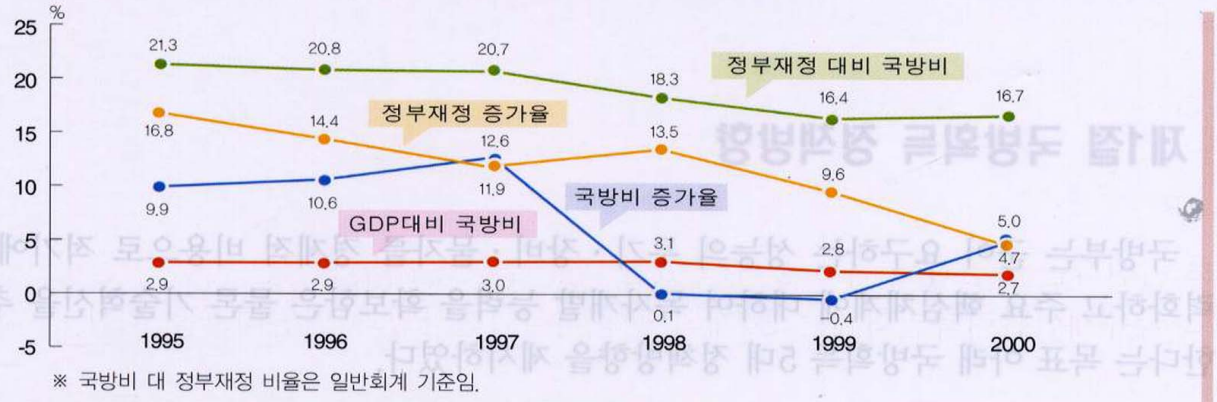
제3절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우리 나라는 1970년대부터 군 현대화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 독자적인 전쟁억제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며, 미래의 불특정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상응한 장병 복지 개선과 군 정보화 · 과학화 등 미래지향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상운영비 소요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 더욱이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적정 국방비는 국가전략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는 1990년대 이후 국가경제 및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하락하여 2000년도에는 GDP의 2.7%, 정부재정(일반회계)의 16.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더라도 1998~1999년간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부재정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물가 및 환율 상승을 고려한 국방비의 실질구매력은 1980년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나라 국방비 부담률(GDP의 2.7%)은 경제력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안보여건에 있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의 GDP

[도표 3-4] GDP/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증가율 비교



※ 국방비 대 정부재정 비율은 일반회계 기준임.

대비 국방비 부담률은 평균 11.3%로서 우리의 약 4배 수준이며, 싱가포르와 같이 당면한 안보위협이 거의 없는 국가도 GDP의 5.0%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 군은 주어진 재원으로 최대의 전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각종 경상적 경비 절감과 국방관리의 혁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체의 절감 노력만으로는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방대한 군사력 건설 소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 전문인력 양성 및 군 구조개선 등에 10년 이상의 선행기간(lead-time)이 소요되는 군사력 건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 군사력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GDP의 3% 이상의 국방 재원이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3)]

3) 한국국방연구원, 「중·장기 국방비 소요판단」(1997), 「중·장기 국방가용재원 판단체계구축」 (1999) 등 참조

내용누락

내용누락

제2절 국방획득업무 제도발전

군은 무기도입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제도를 개선하여 1999년에는 국방획득사업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1. 사업추진 과정의 공개

업체가 무기체계 개발, 생산, 입찰 등 군의 획득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획득사업에 대한 정보확보가 필수적이나, 대부분 비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군 기밀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특혜 의혹을 사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7월 국방획득사업 비밀 분류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밀로 분류해오던 국방획득사업 관련 사항을 '일반'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장비명, 총수량, 사업기간, 일반성능 및 제원, 연도별 물량, 자금총액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략비익무기사업 및 연구개발업무 등 필수분야는 비밀로 분류하되 최대한 등급을 저하시키고, 업체의 사업 추진에 긴요한 중기계획 등 비밀문서는 공개용 발췌본을 별도로 작성하여 조달본부와 방진회 등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여 관련 업체 및 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의사결정 기준 및 절차의 명확한 설정 및 사전공지

기종결정, 도입방법 결정 및 업체선정 등은 무기도입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의사결정 절차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군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하여도 탈락자는 항상 결과에 대해 불신과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평가요소 및 기준을 참여업체에 사전 공지하고, 평가결과 및 의사결정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다. 이 제도는 기종 및 도입방법 결정, 시험평가, 업체선정 등 비교평가가 요구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요소와 기준 및 절차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국방부, 합참, 소요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관련 부서와 기관의 전문인력이 참여한 공개토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제안요구서(RFP) 등을 통해 참여 업체에 사전 공지된다.

3. 비용정보 검증능력 강화로 고가구매 · 예산낭비 의혹 방지

무기의 고가구매로 인한 예산낭비 의혹은 대부분 비용/가격정보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석 및 검증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원화된 비용/가격정보의 수집 · 분석 · 축적 · 분배 · 활용체제를 구축하고 비용분석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전문적인 비용분석을 실시토록 하는 등 비용/가격정보 분석 · 검증 능력을 강화시켰다.

4. 업체와 군간의 정보교류 양성화

업체와 군간의 정보교류는 정보교환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이 미약하고, 업체접촉을 금기시하는 군의 풍토로 인해 업체의 홍보 또는 사업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형평성 문제와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체가 정당하게 군에 정보를 제공하고, 군이 업체의 정보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업체와 군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 정보 요구 및 수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호 교류되며, 필요시 정보제공 요구/수집을 위한 표준양식을 공시하여 자료수집이 공식화된다. 또한 업체의 무기제품/기술정보 설명회 등 각종 기회들을 활용하여 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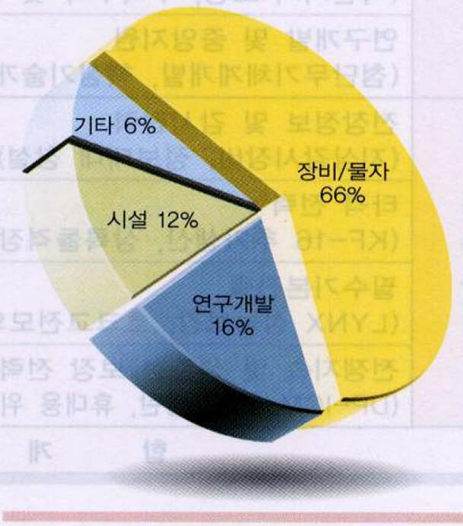
제3절 국방투자사업 추진현황

1. 1999년 국방투자사업 결산

1999년 국방투자사업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환율과 물가의 불안정, 방산업체의 기업구조개선작업 및 노사분규에 따른 경영난 악화, 채권 관리단의 지불보증 기피와 Y2K 전산장애 발생 대비를 위한 업체의 업무 조기종결 등 다양한 집행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투자사업의 예산집행이 어려운 시기였다.

이에 따라 투자사업은 가급적 외자구매사업을 내자구매로 전환하여 국내 고용안정과 방산업체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조기

[도표 3-5] 1999년도 국방투자사업비 용도별 현황



집행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99년도 국방투자사업의 실투자비는 3조 7,612억원이었으며, 이를 장비/물자, 연구개발, 시설 등 용도별로 구분하면 도표 3-5와 같다.

2. 2000년 국방투자사업 계획

가. 투자비 규모

국방비 총액 14조 4,390억원 중 투자비 규모는 5조 3,437억원(37.0%)으로서 1999년보다 1조 6천여 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 경상비 분야에 포함되었던 수리부속 및 정비비 1조 5천여 억원이 투자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133억원(2.2%)이 증가된 규모이다.

2000년도 투자사업은 현 무기체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21세기 무기체계의 자주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연구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2000년도 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도표 3-6과 같다.

[도표 3-6] 2000년도 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

구분	사업내용	사업수(개)	예산액(억원)
계속사업	전장 정보 및 감시전력 (신호/영상정보 수집장비, 감시레이더, 야간투시경 등)	17	2,271
	타격 전력 (대구경다련장, 잠수함, 구축함, KF-16전투기)	34	1조 3,167
	필수 기본전력 (K-9 자주포, 전술통신체계, 소해함, 제2MCRC 등)	5	1조 2,475
	전쟁지속 및 생존성 보장전력 (작전기지 보강, 수리부속 및 정비지원, 각종탄약 등)	90	1조 7,026
	연구개발 및 중앙지원 (첨단무기체계개발, 핵심기술개발, 방위비분담 등)	38	6,550
신규사업	전장정보 및 감시전력 (지상감시장비, 정보대대 창설)	2	42
	타격 전력 (KF-16 추가생산, 상륙돌격장갑차 등)	4	1,355
	필수기본전력 (LYNX 성능보강, 호크교전모의기, 고정형 TACAN 등)	5	141
	전쟁지속 및 생존성 보장 전력 (DP-ICM 성능개량탄, 휴대용 위치식별기, 잠수함 훈련장비 등)	4	410
합 계			5조 3,437

나.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

(1) 지상전력

종심표적 타격이 가능한 230미리 대구경다련장 추가확보사업, 종합 통신 지원을 위한 격자형 전술통신체계(SPIDER), 지상전술 C4I 체계, K-9 155미리 자주포, 단거리 대공유도무기(천마) 등을 계속 추진하고, 한국형 지뢰살포기, DP-ICM 성능개량, 휴대용 위치식별기, 과학화전투훈련통제단 창설, 3탄약창 확장 등의 사업을 착수한다.

▲ K-9 155미리 자주포

▲ 209급 잠수함

▲ KF-16 전투기

(2) 해상전력

대형수송함, 한국형 구축함 KDX-Ⅱ 1차, 209급 잠수함, 소해함 1,2차 건조사업과 PCC 대함 능력보강 및 잠수함 지휘통신체계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KDX-Ⅱ 2차, 차기잠수함, 국내 개발한 상륙돌격 장갑차 확보 사업 및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공 SM-Ⅱ/SAAM, 적어뢰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예인음탐기/어뢰음향 대항체계 등의 사업을 착수한다.

(3) 공중전력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체계개발, CN-235 중형수송기 도입, KT-1 기본훈련기 국내 양산, 노후레이더 교체, 활주로 재포장, 무인경보체계 등을 계속 추진하고, 국내 항공산업 육성 차원의

KF-16 추가생산, 항공승무원 야간투시경, 조종사의 전자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자전 훈련장비 등의 사업을 착수한다.

(4) 연구개발

연구개발사업은 한국여건에 맞는 장기소요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첨단핵심기술분야를 집중 개발할 계획이며, 주요 체계개발 사업으로는 전투기 외장형 전자전장비, 해군전술자료분배체계(KNTDS), 제2공군방공지휘통제체계(MCRC) 등 자동화 체계 및 무인항공기, 원격 화학자동경보기 개발 등이다

▲ 무인항공기(UAV)

제4절 국내 방위산업 기반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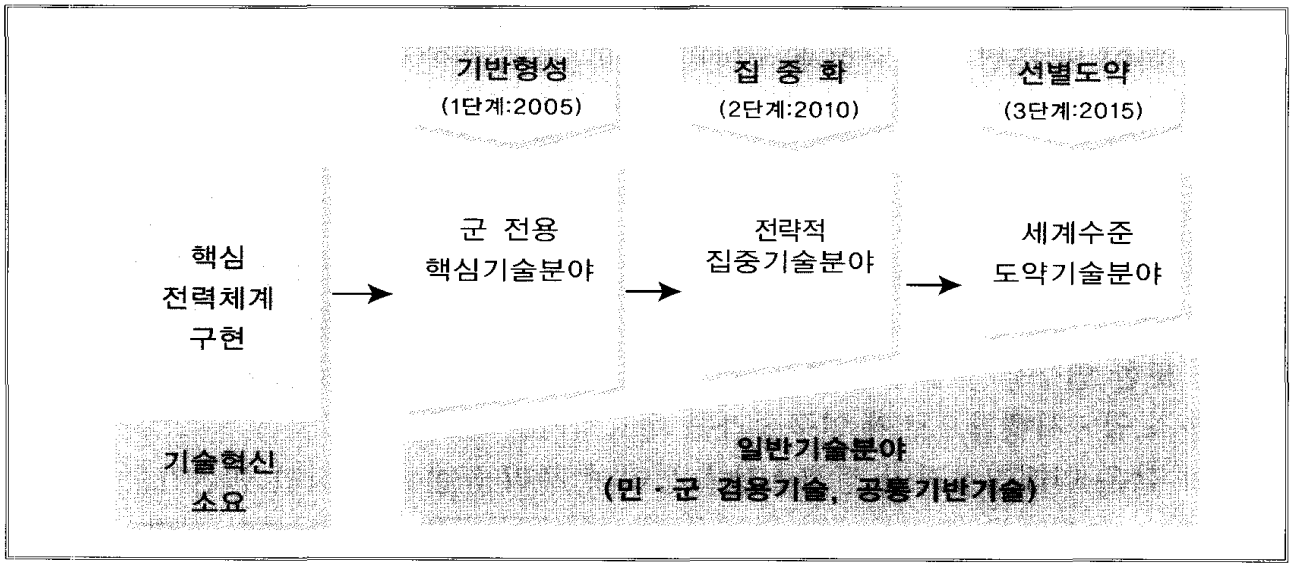
1.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

국방연구개발은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설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를 국산화함으로써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의 국산화에 치중한 결과 아직까지 첨단핵심기술분야는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한국형 첨단무기 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 정책목표를 '2015년까지 국방과학기술의 선진권 진입'으로 설정하고, '국방과학기술 선진화 5대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첫째,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핵심기술소요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도약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 1999년에는 '국방과학기술기획서'를 발간하고 '14개 중점추진 무기체계 및 21개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 개발함으로써 신기술·신개념의 미래 첨단무기 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단계적인 집중투자와 개발을 통하여 기반형성, 집중화, 선별도약으로 전환하면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첨단기술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타분야는 민·군 겸용기술 및 공통기반기술 등 일반기술분야를 점차 증대시키도록 하였다.

[도표 3-7] 단계적 도약 개념



둘째, 핵심기술을 저비용 · 고효율로 획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 목표 수준별 또는 단계별로 다양한 기술확보 모델을 적용하여 연구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선진국에서 초기 단계의 핵심기술을 도입하여 실용화 및 개량개발에 착수하는 '중간진입' 기술개발 방식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개발기간 및 예산을 대폭 절감토록 하였다.

셋째, 효율적인 기술획득을 위하여 국가의 총체적 과학기술기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계된 국방과학기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책입안에 국방부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계를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4년 이후 대학 및 정부연구소에 5개의 특화연구센타를 지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산 · 학 · 연 협력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민 · 군 겸용기술 개발사업은 1998년 4월 민 · 군 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기술개발, 기술이전, 규격통일화, 기술정보교류 등 4대 중점사업을 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부터 2년간에 걸쳐 7개의 시범과제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한 이후 1999년에는 총 47개 과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넷째, 기술개발위주의 기획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핵심기술 개발의 기획-계획-개발-적용-환류 등 전과정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하였고, 개발된 기술은 단순한 기술자료의 축적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방과학기술 DB를 구축함으로써 지식관리형태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토

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방연구개발의 장기적인 육성 · 지원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비를 점차 확대하여 2015년까지는 현재 국방비 대비 5% 수준에서 10% 수준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설비를 확충하여 정보화기반을 확충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래전에 소요될 첨단핵심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2000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경영혁신을 통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명실상부한 첨단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소로 그 위상을 정립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연구원들에 대해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성과급 지급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 · 시행함으로써 연구성과를 제고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을 통하여 우리 군은 독자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21세기의 선진 국방과학기술 강대국으로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다.

2.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기반 강화

1973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의 방위산업은 1980년대 중반에 일부 재래식 무기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정밀기계 및 중화학 공업분야 등에서는 국내 민수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여 왔다.

현재 80여개 방산업체에서 330여종의 방산물자가 생산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3조 4천억원에 이르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첨단무기체계의 소요가 증가하고 무기체계 개발 및 방위산업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비해 기본 병기류에 대한 국내 소요물량은 감소함으로써 방위산업계의 가동률이 50% 수준에 그치는 등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전문화 · 계열화 제도와 방위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가. 방위산업의 전문화 · 계열화 제도 발전

국방부는 1999년 1월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기술력이 있는 우수업체의 방산 참여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생산설비 및 기술면에서 민수분야와 호환성이 높은 분야는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군 소요가 적은 분야는 전담체제화하였다.

이에 따라 범정부 전문평가팀에 의한 업체실사를 통하여 전문화 47개 분야의 40%에 해당되는 19개 분야와 계열화 241개 품목의 61%에 해당되는 147개 품목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전문업체도 172개 업체에서 86개 업체로 축소하는 등 전문화 · 계열화 품목 및 업체를 대폭 정비하였다. 특히 계열화 품목 중 22개 품목은 중소기업보호품목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벤처기업간에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방위산업 육성지원 보완 · 발전

국방부는 방위산업의 육성 · 지원을 위하여 1980년부터 1999년까지 1,186억원의 방위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사업과 연구개발사업 자금으로 방산업체에 총 3,211억원을 융자하였다. 2000년에도 원자재 비축 및 연구개발 자금으로 24개 업체에 4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방위산업육성기금을 추가 조성하여 조성목표액 3,000여 억원을 조기 조성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종 세금 부과로 인한 국방비 부담을 줄이고 방산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관세 등이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도록 방산물자 제세지원제도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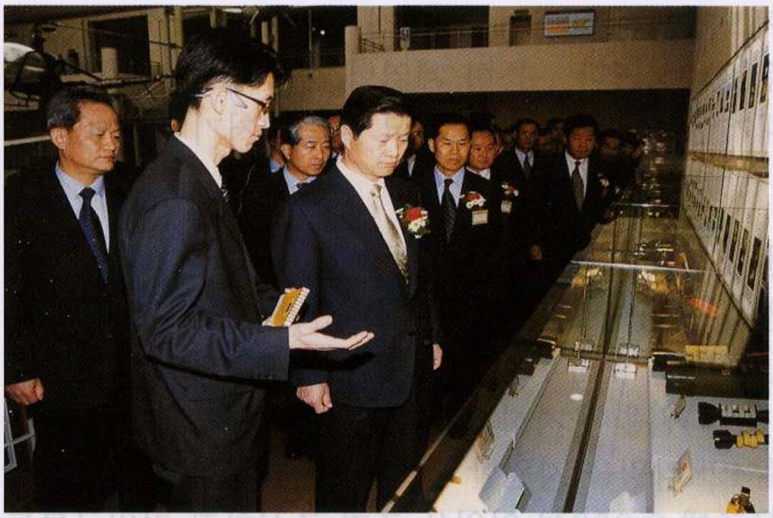
그리고 1999년 3월에는 '방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휴 방산설비로 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신청에 의해 유휴 방산설비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 국제방위산업 협력 강화

국제 방산협력은 방산업계간의 국제협력강화 및 공동생산 · 협력수출 등 협력 가능사업을 발굴 ·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방산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도입된 무기의 전 수명주기 동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품질보증 · 가격정보 교환 · 기술자료 교환협정 체결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미국, 터키, 프랑스, 인도네시아, 베네주엘라 등 18개국과 방산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종전의 미국 위주 방산협력에서 유럽, 아시아, 남미 등으로 다원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방산수출 대상국가와의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방산 수출지원을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해외무관의 수출상담 및 마켓팅활동 지원을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방산물자 수출업 자격부여를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방산물자 수출시 군 보유장비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가와의 군사외교활동을 강화하였



▲ 전쟁기념관 2층에 설치된 방산전시장

다. 그리고 방산수출 홍보를 위한 방산전시장을 전쟁기념관 2층에 설치하여 K-9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등 국산 첨단 무기류를 전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1996년과 1998년도에는 서울국제에어쇼를 개최함으로써 한국 방산물자를 홍보하고 선진 방산업체들과의 기술협력사업 발굴 및 수출확대에 기여하였다. 2001년도에 공군, 항공우주진흥협회, 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 개최할 예정인 제3회 서울국제에어쇼에서는 육·해상 방산장비도 동시에 전시하여 국산 방산물자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홍보할 예정이다.

제3장 21세기를 대비한 국방정보화

제1절 정보화 추진방향

국방정보화는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국방구조 전반을 지식 · 정보중심의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방정보화의 목표는 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지휘통제를 지원하고 평시에는 효율적인 국방자원 관리를 통하여 경제적인 군 운영을 보장하는데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국방정보화 목표달성을 위하여 5대 핵심분야 1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단계화하여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분야(5)	중점과제(15)
미래 정보전 수행을 위한 국방통합정보체계 구축	· 정보전/체계통합전 수행을 위한 국방통합 C4I체계 구축 ·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위한 국방통합자원관리체계 구축 · 국방정보통신 기반체계 구축
정보화 조직/인력 개선 및 효율화	· 국방CIO 제도 및 조직 활성화 · 정보화 추진 전담조직 및 기능 개선 보완 · 전 장병 대상 정보화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정보화 관련 제도 및 절차 개선	· 체계통합 및 공통운용환경 구축 · 국방정보화 사업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 ·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국방업무절차 개선(BPR)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국방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능력 구축	· 국방 시뮬레이션 환경 정비 · 분산 시뮬레이션 기반 구축 · 군별, 제대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체계 구축
국가정보화 정책사업과 연계 강화	· 국가정보화 정책사업과 연계 강화 · 국가정보화 인프라 최대 활용 · 정보화 분야 산 · 학 · 연 협력체계 구축

1단계는 2005년까지 초고속국방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화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지휘통제체계(C4I), 국방자원관리체계 등 국방정보체계의 핵심체계를 우선 구축할 것이다. 2단계로 2010년까지는 정보기술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능확장 및 체계통합을 통한 시스템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3단계로 2015년까지는 모든 국방정보체계를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체계로 구축하여 세계 10대 정보화 강군을 건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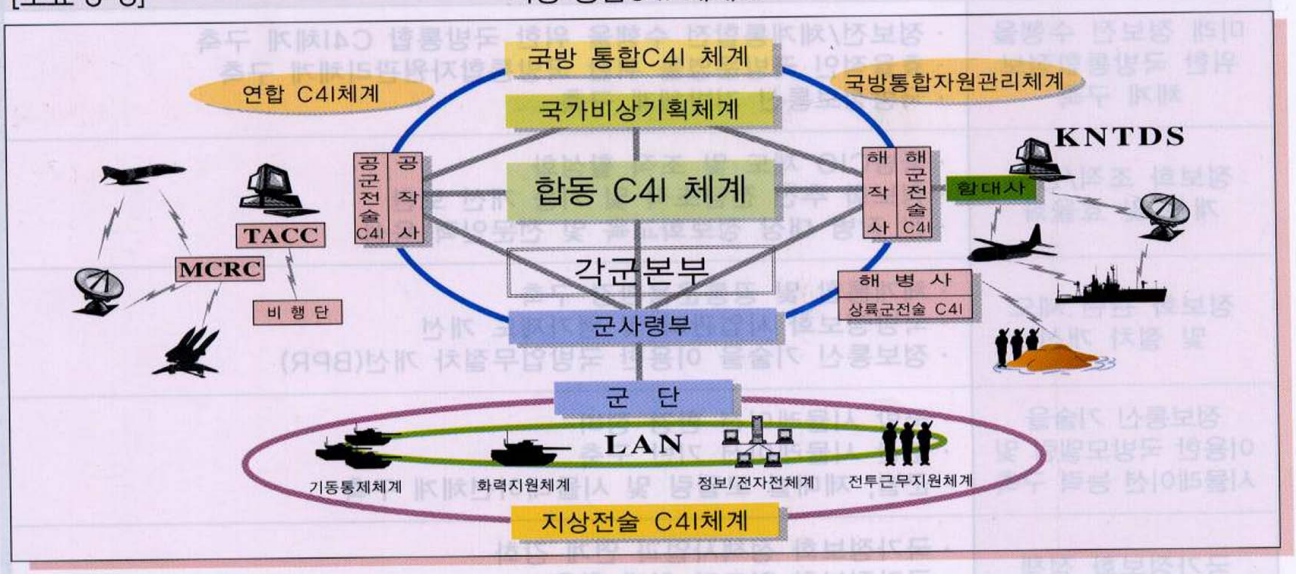
제2절 통합전 수행에 필요한 지휘통제체계 구축

미래 전장환경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보전과 각군 및 기능별 체계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체계통합전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하여 우리 군은 국방통합C4I체계, 합동 및 연합C4I체계와 각군 전술C4I체계를 연계하여 건설 중에 있다.

1. 국방 통합C4I체계

국방 통합C4I체계는 합동C4I체계 중심으로 구축하며 연합C4I체계 및 국가전쟁을 지휘하는 국가비상기획체계와 연동시킴으로써 유사시에는 통합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체계기반 및 공통운영환경을 우선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표 3-8] 국방 통합C4I 체계도



2. 합동 및 연합C4I체계

합동 및 연합C4I체계는 1999년부터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의 주요 전략부대의 지휘소기능을 자동화한 지휘소자동화체계(CPAS)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합동군사정보체계, 합동작전기획계획시행체계 및 합동워게임체계를 통합하는 합동C4I체계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현재 한·미 연합작전에 운영중인 범세계지휘통제체계(GCCS-K) 및 정보수집체계와의 연동을 통하여 전장에서 정보의 우위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C4I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3. 각군 전술C4I체계

각군 전술C4I체계는 지휘통제체계 중 최하위 체계로 정보수집자산(Sensor)과 타격수단(Shooter)을 실시간에 연결하여 지휘·통제하는 체계로 각군 및 전장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기능 위주로 단계화하여 건설하고 있다. 이것을 합동 및 연합 C4I체계와 연동함으로써 모든 정보수집 체계와 무기체계를 상호운용이 가능한 체계로 건설하고 있다.

지상 전술C4I체계는 군단 이하 전술제대의 전장기능을 자동화하여 실시간에 전장을 확인하면서 지휘통제할 수 있는 체계로 1999년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체계를 구축 운영하였고 그 결과 필수기능 위주로 단계화하여 성능개량과 체계확장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해군 전술C4I체계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용중인 해군전술자료체계(KNTDS)의 운용지역을 확대하고 일부 기능을 보강하여 해상상황을 실시간에 파악하여 통합적인 해상작전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전술C4I체계로 발전시키고 육군 및 공군과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군 전술C4I체계의 일부로 현재 운용중인 공군방공지휘통제체계 장비가 한계수명 도래에 따라 제2의 MCRC를 구축하고 2002년에 전력화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것을 전술부대에 필요한 지휘통제 및 정보수집체계와 연동하는 C4I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육군 및 해군과의 합동작전이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3절 효율적인 국방자원관리체계 구축

1. 국방 CALS 및 EC체계

국방부는 1997년 '국방 CALS 컨설팅'으로 시작된 국방 CALS 사업을 통해 군수품의 획득으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수명주기간 업무를 자동화하여 국방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방 CALS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스템 개발과 병행하여 업무를 표준화하고 품목관리자를 전산요원화 시키고 있으며, 전산장비 및 전산통신망 구축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야전운영단계의 국방 CALS시스템인 탄약, 물자, 장비정비, 수송, 시설정보체계 등이 구축되면, 물품을 직접 운용하고 처리하는 편성부대로부터 국방부에 이르기까

지 실시간대(On-Line Real Time)로 업무가 처리된다. 아울러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육·해·공군의 전 제대가 통합된 업무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대에 중요 정보의 열람과 효율적인 군수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세계경제는 정보기술(IT)과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EC)시대로 진입하여 전

[도표 3-9] 국방 CALS목표 체계도

자상거래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관 및 기업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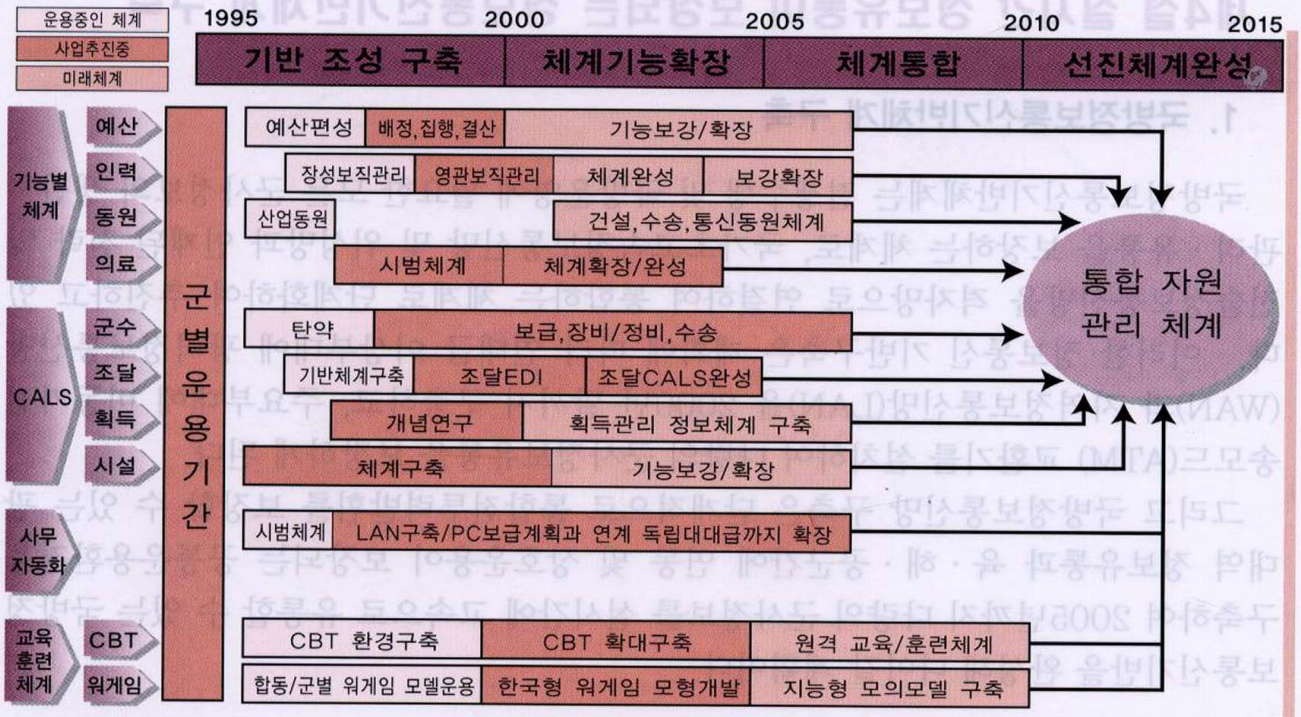
이와 같은 시대상황에 부응하여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내 지식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으로 '정부와 기업간 전자거래 시범사업'으로 국방 조달분야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 조달관리 정보체계(DPAMIS)'를 구축하고 국방부와 업체, 금융기관과 연계한 자료 공유 및 교환체계를 갖추었으며, 2000년 말에는 '정부통합정보기술관리체계(GITIS:Government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ystem)'와 연계하여 '조달 EDI(Electronic Data Interface)사업'을 확대하여 조달 기술정보 서비스, 전자입찰, 웹(Web) 서비스 확대 등의 고객지향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향후에는 국방 CALS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획득단계로부터 야전 운영단계까지 군수관련 시스템을 통합하고, 군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국외의 국방관련 각종 정보체계와 연동환경을 구축하여 전·평시 실시간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2. 자원관리 기능별 체계

국방부는 국방자원을 임무 및 기능체계별로 구분하고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첨단 정보체계를 우선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통합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표 3-10] 국방자원관리체계 발전계획



1995~2007년까지는 기반구축 및 기능확장 단계로 국방통합예산관리체계, 인력관리체계 등을 구축하고, 각군별 · 기능별 체계(인사, 부관, 법무, 헌병, 감찰, 정보 등)를 확장하여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2007~2010년까지는 이러한 체계를 국방부로부터 단위부대까지 통합체계로 구축하여 운용하게 되며, 이러한 기능별 주요자료를 정책DB로 구축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 선진체계를 완성하는 단계로, 국방자원관리 기능별 통합 데이타베이스 및 기능별 의사결정지원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3. 사무자동화체계 활성화

국방부는 작고 효율적인 전자국방 구현과 종이 없는 국방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1996년부터 국방사무자동화체계를 채택하여 전군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자동화체계는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한 웹(Web)환경으로 변환할 계획

이며 2000년까지 사·여단급 부대에 LAN을 설치하고 2004년까지는 연대급 부대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PC보급도 2001년도까지는 사·여단급 부대 행정요원 1인 1대 수준으로 보급하고, 점진적으로 중대급 이상 행정요원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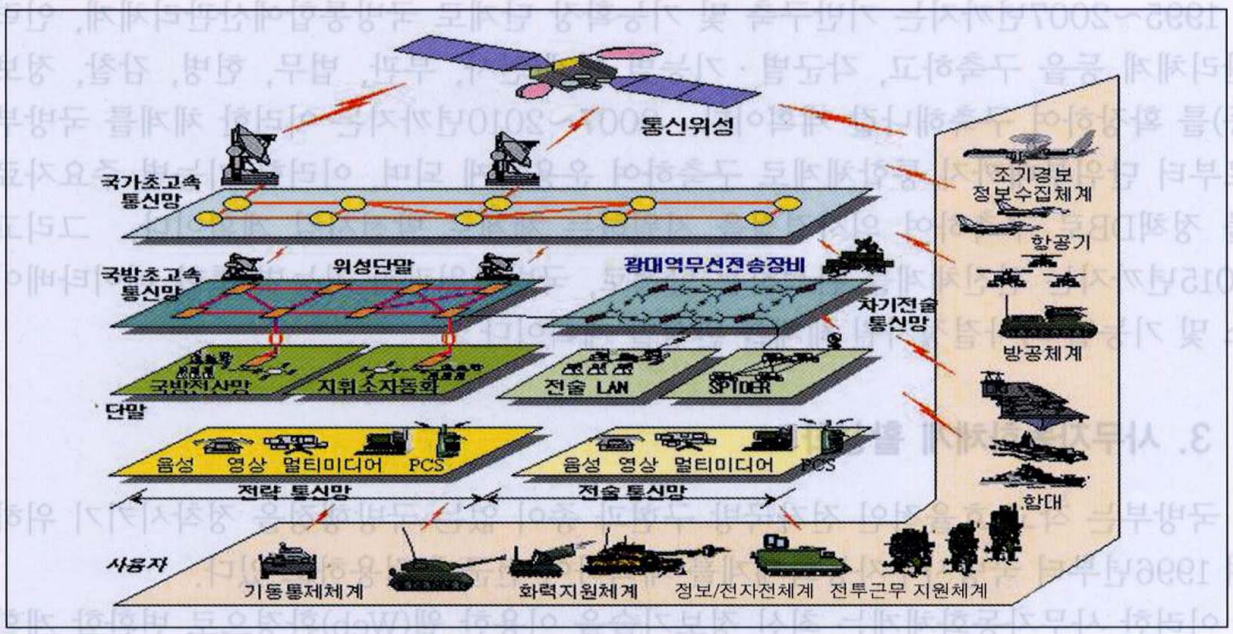
제4절 실시간 정보유통이 보장되는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1. 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는 전쟁수행 및 국방운영에 필요한 모든 군사정보의 생산·관리·유통을 보장하는 체계로, 국가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위성망과 연계된 전략 및 전술정보통신망을 격자망으로 연결하여 통합하는 체계로 단계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반구축은 계획에 따라 연대급 이상부대에 광역정보통신망(WAN)과 지역정보통신망(LAN)을 2000년 말까지 구축하고, 주요부대에 비동기전송모드(ATM) 교환기를 설치하여 다량의 군사정보유통을 보장하게 된다.

그리고 국방정보통신망 구축은 단계적으로 통합전투력발휘를 보장할 수 있는 광대역 정보유통과 육·해·공군간에 연동 및 상호운용이 보장되는 공통운용환경을 구축하여 2005년까지 다량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에 고속으로 유통할 수 있는 국방정보통신기반을 완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도표 3-11] 국방정보통신망 체계도



2. 국방정보통신망 보호대책

군의 정보통신 기반체계 발전에 따라 대용량의 군사 정보자료가 유통되고 있어 정보자료 유출 가능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보안대책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을 폐쇄망으로 구축하여 인터넷 및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있다. 또한 부대간 통신선로에는 통신용 보안장비를 운용함으로써 자료를 100% 암호화하여 외부선로 중간에서 해킹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주요 PC에는 PC용 보안장비를 운용하여 CD 및 디스켓에 의한 자료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향후 인터넷망을 이용한 정보유통량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H/W 및 S/W 보안기법의 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주요 통신망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 컴퓨터 긴급대응반(CERT)을 편성하여 각종 컴퓨터 관련 사고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침입탐지/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CERT의 활동범위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전문직위에 대한 특기 조정 및 장병 입대시 관련학과 출신을 선발하고 국내 · 외 전문기관 교육을 통하여 관련 요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정보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고 있다.

제5절 장병 정보화교육

국방부는 장차전에 대비하여 정예군을 육성하고 국가 정보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지식정보화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보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부대별 임무와 특성을 고려한 정보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사 · 여단급 이상 150개 부대에 정보화교육장 건설을 계획하여 현재 60여 개의 교육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0년 말까지 90개의 교육장을 추가 건설하는 등 정보화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0년 4월부터는 1,600여 개의 대대급 부대에 인터넷교육장을 설치하여 연간 27만 여명의 현역 및 전역장병을 대상으로 인터넷 정보검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6,800여 개의 중대급에는 PC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정보화교육훈련 환경을 구축하여 국방정보체계 운용능력을 배양시키고 정보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도록 원격교육 및 가상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장병정보화 교육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제4장 선진 정예군 운용을 위한 국방인력 육성

제1절 정예 국방인력 육성 및 관리

국방부는 급속한 국방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국방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인 국방인력관리체계 구축, 국방전문인력 육성, 여군인력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효율적인 인력관리

우리 군의 인력정책 기본개념은 21세기의 전장환경에 부합되는 군사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병력집약형의 인력구조를 기술집약형의 전문인력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향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병력을 운영하되 상비인력은 적정 계급구조를 유지하면서 육군은 감축하고, 해 · 공군은 증가시켜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인력구조를 미래첨단전력 운용개념과 부합되게 개편하여 상위계급은 줄이고 중간계급은 늘려 부대확장의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고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직업성을 보장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국방 전문인력 육성

우리 군은 21세기 국방환경의 다변화와 미래전의 양상에 부합하는 전문인력관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정책전문요원이 필요한 인사 · 조직 · 교육, 정책기획 · 군사전략 · 작전, 방위력개선, 군수 · 조달, 국방관리 분석 등 5개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직무분석을 통하여 정책전문직위를 설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독립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한 적정 인력구조를 형성하여 획득-교육-보직-진급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정책전문교육은 학위교육 및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야전, 정책부서, 학교 및 연구기관을

두루 경험할 수 있게 순환 보직을 하게 함으로써 야전에 바탕을 둔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진급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여군인력 활용 확대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개발 그리고 사회참여 확대'라는 정부의 여성인력정책에 따라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위에 대하여 여군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여군인력은 2,085명(장교 및 하사관)이나 2003년에는 3,327명, 2020년에는 7,038명 수준으로 증원하여 간부정원 대비 현재 1.4%에서 5%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도표 3-12] 여성인력 운영계획 (단위:명)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1999년 12월	2,085	2,021	34	30
2003년	3,327	2,785	134	408
2020년	7,038	5,030	1,023	985

여군장교 획득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입학정원의 10%를 모집하고 있으며, 육군은 여군 학사장교를 1999년에 62명을 모집한데 이어 2000년에는 110명으로 그 인원을 대폭 증가시켰고, 해·공군도 여군 학사장교 제도를 신설하여 2000년도부터 해군 15명, 공군 20명을 모집하고 있다.

여군하사관은 현재 육군만 운용하고 있으나 공군은 2001년부터 매년 90명, 해군은 2003년부터 매년 40명씩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매년 인원을 확대하여 1999년 360명(하사관 포함) 규모였던 모집인원은 2000년에는 473명, 2001년에는 573명, 2003년에는 669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여군은 남군과 차별 없이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투, 기술, 행정병과 중 여성 특성에 부합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되도록 하고 법무·군의·치의 분야에도 적극 유치하여 그 보직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여성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보직 및 진급 등의 인사관리를 남군과 동등하게 하여 여군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군 최초 전투기조종사 지망 여자 생도

제2절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발전

우리 군이 지향하는 정예강군 건설을 위해서는 우수 인력의 확보와 함께 획득된 인력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군은 다음과 같은 주요 교육발전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 선승구전(先勝求戰)의 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우리 군은 국방운영의 핵심을 '야전군 이하 작전제대는 작전임무 수행태세 완비에 전념하도록 하고, 각군본부 이상의 정책부서는 미래 군을 기획하고 작전제대를 지원' 하는데 두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군은 각급 학교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전투위주로 사고하고 준비하며 교육함으로써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고 전쟁에 임한다' 는 선승구전의 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교육개혁은 군의 존재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제 어떠한 적이 도발해 오더라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태세를 학교교육부터 구비하자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학교기관에 가장 우수한 교관이 보임될 수 있도록 하고 전 학교기관의 교육과목을 야전과 실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면 개편하는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 국방대학교 창설

국방부는 2000년 1월 기존의 국방대학원과 국방참모대학 및 국방정신교육원을 통합하여 종합교육기관 성격의 국방대학교를 창설하였다. 국방대학교는 국방 최고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산하에 3개 단과대학인 안전보장대학원과 국방관리대학원 및 합동참모대학을 두고 있다. 아울러, 단기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직무연수부, 부설 연구기관인 안보문제연구소와 합동교리발전부를 두고 있다.

교육과정은 1년 과정의 기본과정과 2년 과정의 석사학위과정, 각종 직무와 관련된 4~12주의 단기과정 등 총 1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총 1,400여명의 국방안보분야 전문가를 양성 배출하게 된다.

3. 민 · 군 교육교류 확대

군은 민 · 군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군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민간교육 부문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 등 군내 학위수여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민간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교수 · 교직원 상호교류, 학술정보 상호교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등 기초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학생교류 및 학점제휴 확대 등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교류내용 및 수준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방대학교는 방위산업체 · 경제 · 사회단체 간부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하였던 교육을 2000년부터는 민간교육기관 및 학술단체와 일반기업체 간부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 및 안보는 더 이상 군의 전유물이 아니며 민 · 군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민간 군사전문가 육성을 군이 지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제5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직업군인은 군 임무의 특수성상 격오지 근무, 잦은 이사 및 자녀 교육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인가족 및 전역군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1절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성 보장

1. 직업군인 처우개선

군의 처우개선은 정부의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르되 군 복무의 특수성과 직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생 학비보조 및 별거수당의 신설을 추진하고 위험 · 항공 · 함정 · 접적(특수지)지역 · 장려 수당 등을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근 2년여 동안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일부 수당이 삭감 또는 동결되었으나 2000년에는 기본급 및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 완화를 위해 하반기에 추가로 봉급조정수당을 신설하였다.

2. 군 숙소 확보정책 개선 및 내집마련 대책

직업군인은 격오지 근무, 잦은 이사 등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느 지역에 근무하더라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군 관사를 확보하고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사는 1999년 말 현재 소요(69,374세대)대비 97.3% 보유(67,528세대)하고 있으나 2000년까지는 100%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은 지 25년 이상 된 관사가 9.0%인 6,000여 세대이고, 13평 이하 협소관사가 15%인 10,240세대이다. 군은 2000년부터 이러한 노후 · 협소관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예산과 자체 조달재원으로 교통 · 문화 · 교육여건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 지역별 · 도시별로 단지화된 군 관사를 확보중에 있으며, 건립보다는 매입을 적극 확대하여 향후 군 구조 개편시에도 신축성있게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동거가족의 수 · 성별 · 연령분포 등을 고려하여 평형을 다양화(24/28/32평)하고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자가보유율은 52.3%로 국민평균 주택보급률인 84.2%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직업군인의 내 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인공제회를 통해 매년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토록 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

가. 군 면세제도

군 면세제도는 직업군인의 생활안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면세율 인하, 가전제품(에어콘 제외)의 특별소비세 폐지 등으로 실질적인 면세혜택이 감소하여 명목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소비재는 면세물량을 대폭 확대하였고, 내구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군자녀 교육지원

직업군인은 군 복무의 특성상 전방 · 격오지 근무, 잦은 이사, 별거생활 등으로 자녀교육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에 군은 군 자녀를 위한 기숙사 시설 확충과 특례입학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전국 주요도시 10개 지역 12개 동의 기숙사에 1,868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건립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는 추가소요를 재조사하여 군 자녀 기숙사 건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례입학제도를 통하여 2000년에 고려대, 서강대 등 13개 대학에 군 자녀 137명이 합격하였으며, 2001년에는 특례입학대학을 29개로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대학과 협의 중에 있다.

다. 휴양시설

휴양 · 레저 지원은 중앙휴양시설을 확충하고 전국 주요 휴양지에 민간콘도회원권을 추가 확보하여 민간 레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휴양시설은 현재 6개소를 운용중이고 건립중인 대전 유성휴양소 외에도 7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민간콘도회원권은 현재 1,500구좌를 보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60구좌 이상을 매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제2절 예비역 복지증진 및 예우향상

1. 직업보도 교육활동 및 취업지원 확대

직업군인은 군 계급구조상 50세를 전후하여 대부분이 전역하게 되어 재취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재취업분야는 군 관련분야인 비상계획관, 예비군지휘관, 군무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취업률은 최근 5년간 평균 전역인원의 29.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하는 직업군인에게 사회 재취업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전역 전 6개월 범위 내에서 실시하던 직업보도교육기간을 1998년부터 1년으로 연장하였고 교육비용도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도표 3-13] 1999년도 재취업분야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비상계획관	예비군지휘관	군무원·연구원	복지단·공제회	일반업체
계	1,093	66	476	45	99	407
장 교	860	66	476	45	72	201
준 · 하사관	233	–	–	–	27	206

※ 장교는 군 관련분야, 준 · 하사관은 일반업체 취업이 대부분임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군내교육과정, 사설학원과정,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과정 및 창업 · 자영업 연수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역 전 취업과 연계된 기술 · 기능 및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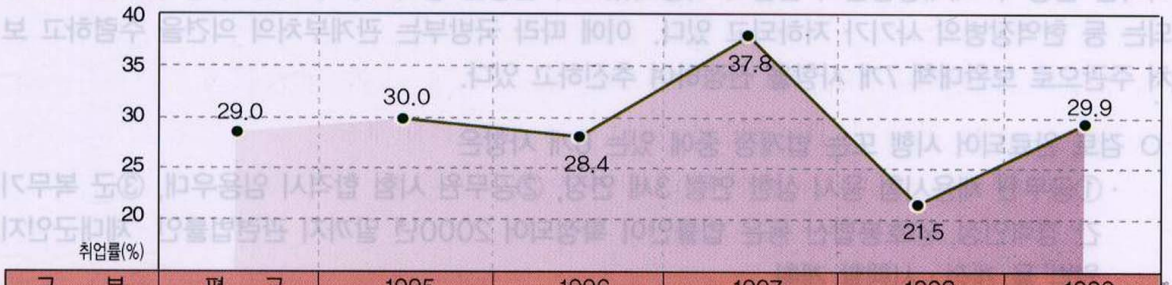
아울러 전역 직후 미취업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창업훈련과정 및 보훈연수원 사회적응교육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는 노동부와 협의하여 전역장병들이 무료로 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등의 유망직종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 전역장병 위탁교육

한편 국가보훈처, 비상기획위

원회, 방산 및 군납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군 출신 인력의 법정 고용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와 국방취업지원센터간의 고용정보전산망을 연결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 일반업체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표 3-14] 10년 이상 근속 직업군인의 전역 후 취업현황



구 분	평 균	1995	1996	1997	1998	1999
전역인원	3,208	4,049	3,353	1,980	3,012	3,650
취업인원	930	1,216	951	749	646	1,093

2. 현역에 준한 복지수혜 확대

군은 1998년에 제정된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예비역에 대한 취업 · 교육 ·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1999년 12월에는 '참전군인지원법'을 개정하여 6 · 25 및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보훈혜택을 확대하였다.

또한 2000년 7월부터는 군인공제회 아파트 분양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망시 장제비 및 장의용 태극기 지원, 군병원 무료진료, 군 경력 고려 국가자격 취득과목 확대, 제대군인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입법은 되었으나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방호 · 방산 · 군납업체 등에 전역군인 우선고용직위 지정, 공공기관 건립주택 특별분양, 고궁 및 공원요금 감면 등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3. 예비역 기금확보 수익사업 추진

군사문제연구원은 1994년 예비역의 군사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군사문제연구원은 우수 벤처기업 투자 등의 수익사업을 통하여 기금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 군필자 가산점제 보완대책

군필자 가산점제는 1961년에 제정되어 4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온 제도로 군복무로 인한 학업 및 생업 중단, 취업여건의 불이익 등에 대해 개인의 권익을 보상하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9년 12월 23일 여성 및 병역면제자 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러한 결정 후 제대장병들의 반발이 비등해졌으며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등 현역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훈처 주관으로 보완대책 7개 사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검토 완료되어 시행 또는 법개정 중에 있는 6개 사항은
- ·①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 3세 연장, ②공무원 시험 합격시 임용우대, ③군 복무기간 경력인정, ④호봉합산 등은 법률안이 확정되어 2000년 말까지 관련법률인 '제대군인지원법'을 개정 · 시행할 계획
- ·⑤제대군인 직업훈련 강화
  - 국방부 자체적으로 직업보도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을 활성화
  - 노동부 주관으로 취약계층 직업능력 계발계획 등에 반영, 시행 중
- ·⑥대학 복학생 학비 대부지원은 예산여건 및 타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무이자 또는 저리 대부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부 우선권만 부여하며

○ ⑦국가사회 봉사활동 가점제는 시행에 따른 사회기반 조성 미흡 등의 사유로 보훈처에서 장기과제로 선정하여 연구 · 검토 중에 있다.

제6장 국가총력전 수행을 위한 동원태세 확립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비전력은 즉응전력 위주로 유지하면서 예비전력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는 추세이다. 한정된 국가재원으로 대규모 상비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비 지출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므로 예비전력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차전의 양상은 국가의 모든 자원이 동원되는 국가총력전이 예상되므로 유사시 예비전력의 효율적인 동원집행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즉각 전력발휘가 가능한 예비전력 육성을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 및 초전 즉응동원태세 확립에 역점을 두고 동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제1절 전시대비 동원태세 확립

1. 인력동원

인력동원에는 전시에 부대 증편 및 창설소요와 손실보충요원으로 현역부대에 동원되어 전투요원으로 활용하는 병력동원과, 군사지원업무인 탄약 및 보급품 운반 등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전시근로소집, 전문기술이 필요한 장비를 운용하거나 정비하는 기술자를 동원하는 기술인력동원 등이 있다.

군은 1999년 이후 예비전력의 주축을 이루는 병력동원 자원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 · 발전시켰다.

첫째, 읍 · 면 · 동 병무조직 폐지에 따라 병무청 병력동원 집행관 요원을 보강하고 동원병력집결지를 조정하여 단시간내 수송이 가능하도록 동원집행능력을 보강하였다.

둘째, 동원소요 대 가용자원을 비교 · 분석하여 배정지역을 조정하고 군사특기별 자원활용 범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병력동원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동원지정시 비적소 특기자 또는 연차 초과자 등의 변동자원에 대해서만 대체지정을 함으로써 부대 및 보직고정을 통해 부대 전투력 향상을 기하고 동원지정시 매년 부대 및 보직변동에 따른 불만을 해소시켰다.

넷째, 손실보충소요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산정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동원자원 소요와 집행을 연계시켜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다섯째, 향방작전계획과 동원병력집결지 경계계획을 통합하여 전쟁초기 향토방위 능력을 보강하였다.

여섯째, 전시 수행해야 하는 부대임무를 고려하여 부대 증편 및 창설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동원운영계획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전시동원집행 부담을 해소시켰다.

일곱째, 예비역장교 진급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전시 인력운영계획상 계급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예비군 분야에 근무하는 예비역 장교의 근무의욕을 증진시켰다.

군사업무 지원분야에도 단순 노무인력을 과감히 줄이고 민간 전문기술인력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중 기술면허 · 자격 취득자는 우선적으로 기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시에 우편 교부하던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를 충무3종 사태시에는 직접 교부토록 함으로써 전시근로소집의 효율성을 높였다.

2. 물자동원

물자동원이란 유사시 군의 작전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군이 평시에 운영하고 있거나 전시용으로 비축한 자원을 제외한 부족자원을 국내 민 · 관의 보유자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민 · 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 · 장비 · 시설 · 용역 등은 사용[4] 및 수용[5] 또는 통제운영[6]의 방법으로 동원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전시소요 동원물자는 산업 · 수송 · 건설 · 통신분야별로 그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의 주무부처가 동원하여 주고, 군은 동원된 자원을 사용하는 주체로서 매년 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분야의 경우 일부 물자가 군이 요구하는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군은 그 부족원인을 분석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송 · 건설 · 통신분야의 풍부한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동원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산업동원분야 전산화사업을 1997년 10월에 완료하여 전산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수송 · 건설 · 통신 동원분야도 전산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시에 미(美) 증원군에게 지원할 수 있는 품목도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동원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

4) 사용동원은 일정기간 동원하여 사용하다가 동원해제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장비와 업체를 동원할 때 적용한다.
5) 수용동원은 동원과 동시에 물자 및 업체의 소유권이 소유자로부터 인수기관에 이전 취득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소모성물자 동원시 적용한다.
6) 통제운영은 동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생산, 수리, 가공, 유통과정 등을 통제하는 것이며 통제부분 외에는 업체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아울러 동원보상비 지급지침을 매년 작성하여 전시 또는 실제훈련시 동원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가. 산업동원

산업동원은 1종부터 9종의 물자와 생산 및 정비업체, 홍보매체, 병원, 주유소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물자의 경우 과도한 군 규격요구로 인해 초기 동원충족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수용 물자 중 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군 규격을 완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동원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원물자에 대한 실제 생산훈련을 실시하여 동원업체의 전시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매년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동원능력의 실태를 파악, 동원운영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동원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전시에 군 병원을 창설하는 대신 민간병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병원 동원운영 방법을 사용동원에서 통제운영으로 개선하고, 군 병원 중심의 후송체계를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군과 민간인을 동시에 고려한 의료지원체계를 확립하였다.

나. 수송동원

수송동원은 유사시에 군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 · 선박 · 항공기 등의 수송용 장비와 장비의 정비업체, 운송, 하역 등의 업체를 사용동원 또는 통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군은 상호 보완 · 협력관계에 있는 수송장비 및 정비업체간의 통합(Package) 동원과 세트(Set)화 동원을 통하여 전시 수송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부족한 수송장비를 동일 지역 내에서 다른 차종으로 대체 동원하는 등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전시 동원능력을 확대하고 전시 부대 창설소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 건설동원

건설동원은 건물, 토지,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정비업체 및 건설업체 등을 사용동원 또는 통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군 표준장비를 성능이 유사한 민간장비로 대체하고 유사 품목을 발굴하여 동원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라. 통신동원

통신동원은 위성통신 및 일반통신회선(국제회선, 시외회선, 시내회선)과 정보통신 공사업체를 사용동원 또는 통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전시 군사작전 지휘통신망을 신속히 지원하여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질의 회선으로 동원지정하고 있으며, 통신동원회선 실제 구성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동원절차를 숙달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민간자원 활용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다.

제2절 향토방위작전 수행능력 향상

1. 향토방위 작전동원

향토방위 작전동원은 전시 또는 평시에 적 또는 반 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적 또는 무장공비를 소탕하고 중요시설 및 병참선 등을 경비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은 1961년 제정되어 향토방위작전 수행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수 차례의 개정으로 보완되어 왔다. 1999년 7월에는 1996년 9월 강릉지역의 북한 잠수함에 의한 무장공비 침투 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개정하였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동원초기 응소율 향상을 위해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동원명령 발령시 도표 3-15의 응소 기준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도록 하였으며,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소속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의무 불이행 시 또는 동원기피 목적의 위장 전출 시에도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도표 3-15] 응 소 기 준 시 간

구 분	응소기준시간
· 지역내 거주 / 지역내 출타자 (해당 구 · 시 · 군 및 인접 구 · 시 · 군)	· 향방동원 발령통지로부터 6시간 이내
· 지역외 거주 / 지역내 이외의 지역 출타자(사전 신고시)	· 향방동원 발령통지로부터 24시간 이내
· 도서지역 / 출어한 어선승선자 등 (사전 신고시)	· 향방동원 발령통지로부터 48시간 이내

아울러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예비군 육성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방위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향방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지역예비군의 경우 군 또는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직장의 장이 지원토록 규정함으로써 향방작전 수행능력의 향상을 기하게 되었다.

2. 전투근무지원

향토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효율적인 전투근무지원을 위하여 예비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분배계획 및 지급절차 등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전투장구류도 즉각 지급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평소에 품목별 세트(Set)화하여 분배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이루어졌다.

또한 원활한 예비군 급식지원을 위하여 지역 방위지원본부와 협조하여 식사준비에 따른 각종 취사기구, 운반수단, 연료공급을 포함한 제요소를 사전에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급식지원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작전지원을 위한 적정 수송수단 및 차량소요대수를 판단하여 방위지원본부와 협조, 관리하도록 하는 등 향토방위작전시 예비군 작전을 위한 전투근무지원태세를 확립하였다.

제3절 예비군자원 관리와 교육훈련

1.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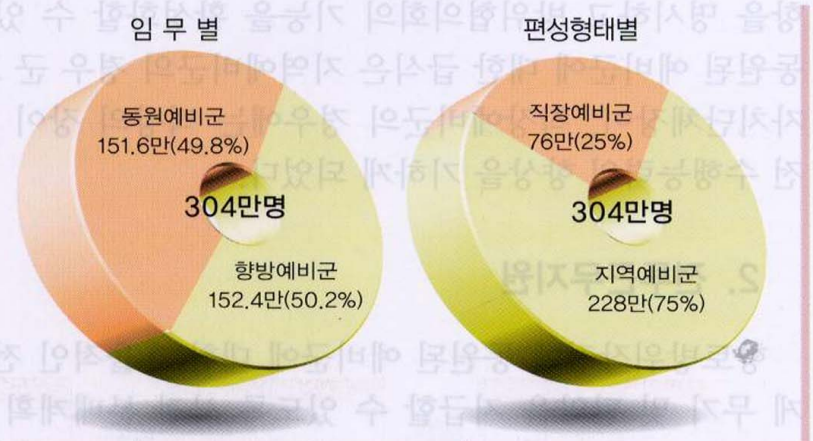
정부조직의 개편에 의해 읍 · 면 · 동의 병무조직이 폐지되고 인구가 적은 동사무소가 통 · 폐합됨에 따라 예비군 및 동원업무체제 또한 이에 맞춰 정비가 이루어졌다.

우선 읍 · 면 · 동장이 수행하던 예비군 편성 및 동원기능을 지방병무청장이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지역예비군중대와 지방병무청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예비군편성과 자원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과 지역예비군중대간 온라인(On-Line) 전산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예비군 지휘관의 선발에 있어서는 체력검정과 현역 복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선발과 연계시켜 성실하고 우수한 자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무 및 생활여건 제고를 위해 예비군 지휘관의 복무실적 등을 고려한 근무지역 변경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지휘관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휘관 재량에 의거 수시로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예비군 자원관리에 있어서는 신규 예비군 대상자의 예비군 대원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전역하는 부대에서 지방병무청에 관련 자료를 보내어 자동으로 예비군에 편성토록 개선하였다. 현재 예비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원현황은 도표 3-16과 같다.

[도표 3-16] 예비군 자원현황



2. 교육훈련

과거 수 차례에 걸쳐 국민편익 도모 차원에서 예비군 교육훈련시간이 단축되어 왔으며, 현재 1년차와 8년차에 속해 있는 예비군은 훈련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나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예비군 훈련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복무년차에 따른 차등훈련으로 임무와 연계된 훈련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훈련횟수는 감소시키는 대신 훈련단위당 시간은 증가시키고 전시에 개인 및 부대임무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훈련과제를 선정하여 실습위주의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비군 복무체계를 1~4년차는 동원예비군, 5~8년차는 향방예비군으로 구분하여 예비군복무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 동원 예비군 전투력 복원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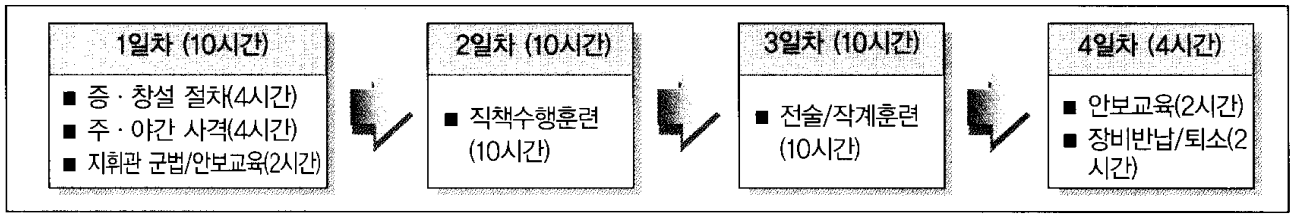
한편 현행 예비군에게 적용해 주고 있는 동원 및 훈련 보류제도는 안보환경과 사회여건의 변화로 일부 직종은 보류의미가 상실됨에 따라 보류명분이 없는 직종은 폐지시키고, 관련 유사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평시 국가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직종으로 보류대상자를 축소 조정할 예정이다.

가. 동원훈련

동원훈련은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된 자원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 팀 단위 직책수행훈련, 전시 작전계획시행 훈련, 부대 증 · 창설절차 숙달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예비군 교육의 핵심이 되는 훈련이다.

1999년부터는 훈련기간을 연간 3박4일로 연장하고 야간전투, 직책수행훈련 및 전술훈련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훈련기간과 세부 훈련내용은 도표 3-17과 같다.

[도표 3-17] 훈련기간 및 세부 훈련내용



나. 동원 미참가자/동원 미지정자 훈련

동원 미참가자/동원 미지정자 훈련은 2~4년차 동원 미지정자원을 대상으로 예비군훈련장에서 4일간 출 · 퇴근하면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 훈련은 특히 주특기 및 팀단위 직책수행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병 이외의 각 병과훈련은 해당 병과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다. 향토방위 기본훈련 및 향토방위 작계훈련

향방기본훈련은 5~7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향토방위 작전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임무위주 훈련을 통해 개인 전투기량을 숙달하고 향토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향방작계훈련은 2~4년차 병 자원중 동원훈련 미참가자, 5~7년차 병 자원, 2~7년차 동원 미지정 하사관 자원을 대상으로 향방작계 시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전 · 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한다.

라. 교육훈련 지원

예비군 훈련자 전원이 동시에 순환실습이 가능하도록 예비군 훈련장의 과제훈련장 및 시설물 배치를 조정하여 실습간 유휴병력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훈련통제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흥미 유지를 위해 창의적인 훈련통제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훈련편의시설 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동시에 예비군 훈련장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훈련장별 종합발전계획에 의하여 훈련장을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훈련받는 예비군 대원의 중식여건 개

선을 위하여 훈련장별 예비군식당을 건립하고 있으며, 향방기본 및 동원 미참자훈련 참가자에 대해서는 1일 1,500원의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전국단위로 훈련을 자율적으로 입소할 수 있게 하여 소속 예비군 훈련장보다 생활권내의 타 부대 훈련장이 훈련받기가 용이할 경우에는 타 부대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예비군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2000년도 예비군 교육훈련시간은 도표 3-18과 같다.

[도표 3-18] 2000년도 예비군 교육훈련시간 (단위:시간)

신규 전역자(간부/병)				100					100
병	1년차			100				4	96
	2~4년차	동원지정자		100	34(3박4일)				66
		동원미지정자		100		32		12	56
	5~7년차			68			8	12	48
	8년차			68					68
간부	1년차			100				4	96
	2~7년차	동원지정자		100	34(3박4일)				66
		동원미지정자	장교	100		34(3박4일)			66
			하사관	100		32		12	56

제4부 21세기를 대비한 국방개혁

제1장 국방개혁의 추진방향
제2장 국방개혁의 성과
제3장 향후 추진계획

여 백